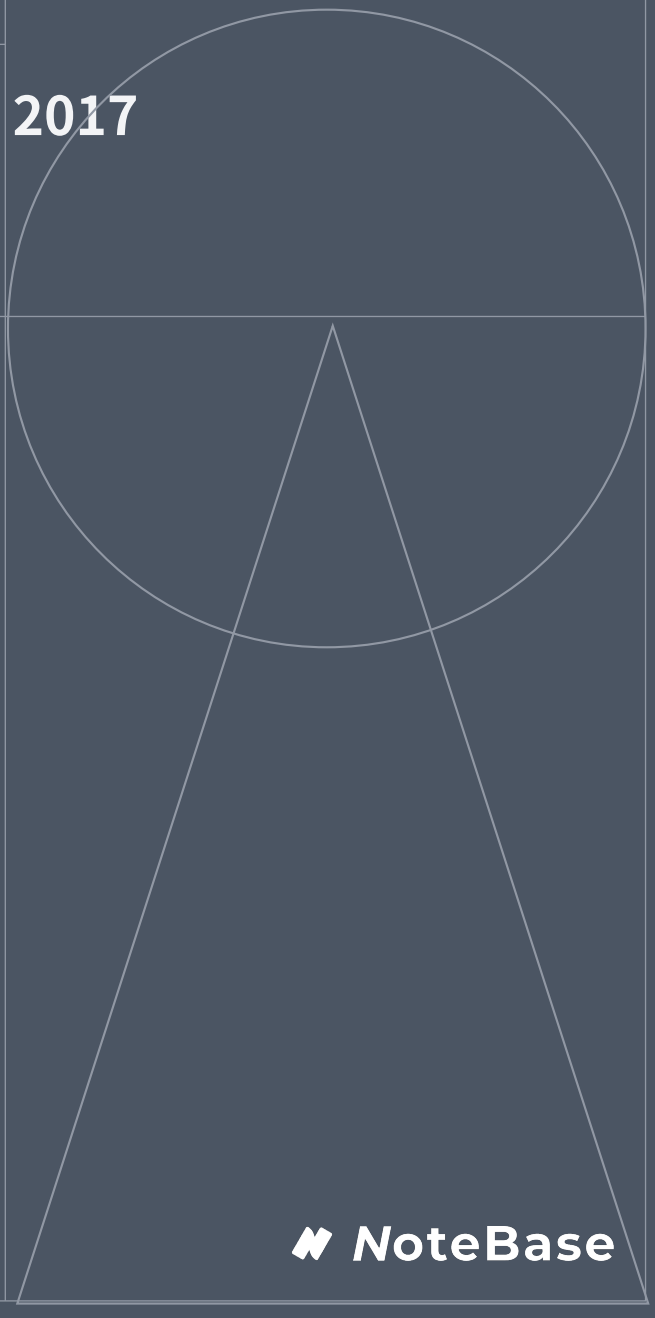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7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7

문 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②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④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서명과 비준은 구별되므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이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탈냉전기에는 환경·보건·인권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안보 문제도 여전히 주요 국제문제**이다. 냉전기의 양 진영 간 대립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국가 간 무력 충돌, 핵 확산, 테러 등의 위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② X: 환경오염이나 감염병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의 독자적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원인 제공 국가의 책임과 별개로, 국가 간 협약과 국제기구의 활동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③ O: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정한 국제 협약이다. 미국은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자국 경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여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비준을 거부했다는 설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④ X: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격차에서 비롯되는 국제문제는 **남북문제**이다. 동서문제는 냉전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이념·체제 대립을 가리킨다. 경제 격차로 인한 갈등을 설명하려면 '동서문제'를 '남북문제'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②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국회'는 **정부**로 고쳐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여러 정당이 함께 활동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② O: 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③ X: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 해산의 제소 주체는 **정부**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선지는 제소 주체를 '국회'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산을 청구하는 기관과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

④ O: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한다.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고, 정책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기능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지만, 사유재산제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을: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들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병: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에게 양도하면, 그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①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②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④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병의 홉스는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3의 주권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양도하고 절대적 통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로크나 국민 전체를 주권자로 본 루소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사유재산제로 인한 불평등을 지적한 루소, 을은 재산권 보호와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강조한 로크, 병은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절대 복종할 것을 주장한 홉스이다.

① O: 홉스는 자연 상태의 투쟁을 끝내고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양도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권 보호에 필요한 권한을 정부에 제한적으로 위임하며, 루소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스스로 주권자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과 구별되는 주권자에게 **가장 강한 통치권을 부여**한 입장은 홉스이다. 다만 홉스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② X: 루소는 국민 전체의 공통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였다. 로크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이 모두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X: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지만, 권리 침해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제재할 공통 권력이 없어 재산권이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반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자연 상태를 평화롭게 본 사상가의 조합은 을과 병이 아니라 갑과 을이다.

④ X: 국민주권론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루소와 로크는 국민을 정치권력의 근원으로 보았지만, 홉스는 권리를 양도받은 **주권자의 절대적 권력**을 강조하였다. 세 사상가가 모두 사회계약으로 국가의 성립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가)	(나)	(다)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아니요	예

①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②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는 현대 민주 정치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한다. 반면 (가)는 대의제를 채택했지만 재산·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한 근대 민주 정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가)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근대 민주 정치이다. (나)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의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다)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고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대 민주 정치이다.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치를 하는 방식이다.

① X: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시민이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제가 발달하였다. 추첨이나 윤번제로 공직자를 충원한 것은 **(나)의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시민들이 돌아가며 공직을 맡는 방식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뒷받침하였다.

② X: (나)의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헌주의는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맞지만 입헌주의를 고대 아테네의 특징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③ X: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들이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등을 요구한 운동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근대로 이행시키려는 운동이 아니라, 근대의 재산 등에 따른 제한 선거를 극복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민주 정치의 발전 단계로 연결하면 (나)에서 (가)가 아니라 (가)인 근대에서 (다)인 현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O: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재산·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여 여성을 배제하였다. (다)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성별 등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철폐**하여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고 보통 선거를 실현하였다.

NoteBase

문 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구분	지역구		비례 대표	
전국	선거구 수	의원 정수	선거구 수	의원 정수
	500	500	1	50

①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②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국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지역구 의석이 500석으로 비례 대표 50석보다 훨씬 많다. 지역구의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유권자의 표가 유력 후보에게 집중되기 쉬워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므로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

② O: 표에서 지역구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가 모두 500이므로 선거구마다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여기에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면 각 선거구의 1위만 의석을 얻어 군소 정당보다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 유권자도 자신의 표가 당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표를 피하려고 유력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 두 거대 정당으로 지지가 집중되기 쉽다. A국은 전체 550석 중 **지역구 의석이 500석**을 차지하므로 비례 대표제의 다당제 촉진 효과보다 이러한 양당제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거 제도만으로 양당제 형성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것은 **비례 대표 50석**이다. 정당별 총 의석수에는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얻는 의석도 포함되므로, 정당 득표율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 결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④ X: 후보자 개인을 선택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도와 지역 조직 기반을 갖춘 현직 의원**이 정치 신인보다 유리하다. 현직 의원은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지지 기반을 쌓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NoteBase

문 6.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B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보기>

ㄱ. A는 측정이나 실험을 통한 구체적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ㄴ. A는 실증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한 결론 도출에 적합하다.
ㄷ. B는 해석적 연구를 통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하다.
ㄹ. B는 직관적 이해보다는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계량화된 자료로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A는 **양적 연구**로, 측정·실험을 통한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B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질적 연구**이므로, 통계 분석이나 보편적 법칙 발견보다 행위의 맥락을 중시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양적 연구이고, B는 인간의 행위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이다.

ㄱ. O: 양적 연구는 변수들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고, 측정이나 실험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따라서 A가 구체적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양적 연구의 특징에 부합한다.

ㄴ. O: 양적 연구는 관찰·측정 등으로 얻은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검증하는 **실증적 방법**을 따른다.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

ㄷ. X: 질적 연구는 해석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자가 어떤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한다. **보편적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B의 목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ㄹ. X: 질적 연구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는 **직관적·공감적 이해**를 중시한다.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A인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징이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은 ㉠햄버거의 등장이라고 하면 흔히 미국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햄버거의 기원을 몽골의 유라시아 원정 때부터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몽골의 고기를 갈아 먹는 문화가 러시아로 전해진 후, 러시아인은 생고기를 갈아 다진 양파와 날달걀을 넣어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전해진 후,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형태로 미국에 전해졌다. 햄버거가 미국에 전해진 초기에는 일반인 대다수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맛과 간편성에 주목한 ㉣청소년과 하층민들이 햄버거를 즐겨 먹게 되었고, 이후 여러 햄버거 체인들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청소년과 하층민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음식 문화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면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햄버거 등장은 기존에 없던 음식이라는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 낸 **발명**에 해당한다. 발견은 이미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 등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발명과 구별된다.

② X: ㉡은 미국의 음식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온 **문화 전파**의 사례로,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빠른 변화를 제도나 가치관 등의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부조화가 생기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이러한 변화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X: ㉢은 함부르크 스테이크라는 음식 문화가 미국으로 전해진 문화 전파의 사례이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지배나 외부의 강압에 의해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문화가 변하는 현상인데, 제시문에는 **문화 수용을 강요한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음식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 없다.

④ O: 하위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특정 지역·계층·세대 등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다른 집단의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이다. ㉣에서는 일반인 대다수와 달리 **청소년과 하층민이라는 특정 집단이 공유**한 햄버거 식문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단별 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

NoteBase

문 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③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④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학교는 교육·연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 사회**이다. 구성원들이 주로 정해진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수단적인 관계를 맺으므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2차 집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부분적 접촉이 중심인 집단이다. 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 등이 교육·연구라는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므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 사회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 의지로 형성된** 이익 사회이다. 여기서 '이익'은 경제적 이윤만을 뜻하지 않는다.

② X: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결성되므로 이익 사회이다. 다만 명시적 규칙과 구성원의 지위·역할을 갖추고 활동하는 **공식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은 사내 동호회처럼 하나의 공식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친목이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을 말한다.

③ X: 혈연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진 친족 집단은 공동 사회이지만, 종친회는 친목 도모나 공동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결성한 **이익 사회**이다. 친밀한 교류를 통해 1차 집단의 성격을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곧 공동 사회라는 뜻은 아니다. 1차·2차 집단은 접촉과 관계의 성격으로, 공동 사회·이익 사회는 형성 과정과 결합 의지로 구분한다.

④ X: 대기업은 명시적 규칙과 분업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지위·역할이 정해진 공식 조직이다. 그러나 공통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친목 집단·이익 집단·시민 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스스로 입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을 자발적 결사체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9. 문 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	아니요	예
(나)	예	아니요
(다)	A	B
(라)	C	D

①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②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③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④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해당하는지 물으면 사회보험의 A는 '아니요', 공공부조의 B는 '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모아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둘 다 '예'가 되어야 하므로, 사회보험은 '아니요', 공공부조는 '예'인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X: 낙인은 복지 수급자가 가난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이다.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공공부조**에서 발생하기 쉽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로 급여를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회보험 '아니요', 공공부조 '예'로, (나)의 응답과 반대이다.

③ O: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한 연령·소득인정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과 구별된다. 따라서 (다)가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사회보험의 A는 '아니요', 공공부조의 B는 '예'이다.

④ X: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한다. 공공부조는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원 요건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라)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예', D는 '아니요'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

(단위 : %)

자녀의 계층	갑국		을국		병국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상층	7	3	18	2	12	8
중층	24	6	4	6	42	18
하층	54	6	56	14	16	4
합	100		100		100	

①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③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④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다른 자녀 중 상층 2%는 상승 이동, 하층 14%는 하강 이동을 한 경우이다. 중층의 불일치 6%를 모두 상승 이동으로 보아도 상승 이동은 최대 8%이므로,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비율은 각 나라의 전체 자녀를 100%로 한 값이다. 같은 나라에서는 비율이 클수록 자녀 수도 많다. 자녀의 계층이 부모보다 높으면 세대 간 상승 이동, 낮으면 하강 이동이며, 부모와 계층이 같으면 계층 대물림에 해당한다.

① X: 갑국 자녀의 계층별 비율은 '부모와 일치'와 '부모와 불일치'를 더해 구한다. 상층은 7 + 3 = 10%, 중층은 24 + 6 = 30%, 하층은 54 + 6 = 60%이다. **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피라미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구조이다.

② O: 을국의 상층 자녀 중 부모와 계층이 다른 2%는 부모가 중층 또는 하층이므로 상승 이동한 경우이다. 하층 자녀 중 부모와 계층이 다른 14%는 부모가 상층 또는 중층이므로 하강 이동한 경우이다. 중층의 불일치 6%는 부모가 하층이면 상승 이동, 상층이면 하강 이동이다. 이 6%가 모두 상승 이동이어도 상승 이동 비율은 최대 2 + 6 = 8%이며, 하강 이동 비율은 최소 14%이다. 따라서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하강 이동한 자녀 수보다 적다**.

③ X: 병국의 '부모와 일치' 열에서 상층과 하층의 합은 12 + 16 = 28%이고, 중층은 42%이다. 따라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해도 중층보다 적다**.

④ X: 계층 대물림의 규모는 각 나라의 '부모와 일치' 열에서 비교한다. 갑국은 상층 7%, 중층 24%, 하층 54%이고, 을국은 상층 18%, 중층 4%, 하층 56%이며, 병국은 상층 12%, 중층 42%, 하층 16%이다. 계층 대물림이 가장 많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하층, 병국은 중층**이다.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으므로 이때 자녀의 계층은 부모의 계층이기도 하다.

NoteBase

문 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A	B	C	D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6	10

<보기>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재화는 A이다.

ㄴ. D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이다.

ㄷ. A와 D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ㄹ.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격이 모두 10% 오를 때 판매 수입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A는 **수요량 감소율이 가장 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 D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똑같이 10% 늘어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판매 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다. 가격이 10% 오르면 가격은 처음의 1.10배가 되므로, 인상 후 수요량의 배율은 판매 수입의 배율을 1.10으로 나누어 구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 변동률의 절댓값의 비율이다. 여기서는 가격 상승률이 모두 같으므로 수요량 변동률의 절댓값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

ㄱ. O: A의 판매 수입은 10% 감소하므로 처음의 0.90배이다. 수요량은 처음의 $\frac{0.90}{1.10} \approx 0.8182$배로, 약 18.18% 감소한다. 같은 가격 상승률에서 B·C·D의 판매 수입 변화율은 각각 0%·6%·10%로 A보다 높으므로 수요량 감소율은 A보다 작다. 따라서 **수요량 변동률의 절댓값이 가장 큰 A**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

ㄴ. O: D의 판매 수입은 10% 증가하여 처음의 1.10배이다. 수요량은 처음의 $\frac{1.10}{1.10} = 1$배이므로 변하지 않는다. 수요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관계이다. D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 수요를 보이므로 이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ㄷ. X: A의 수요량 변동률은 약 −18.18%인 반면 D는 0%이다. **변동률의 크기부터 다르다.** A의 판매 수입 변화율 −10%와 D의 10%를 수요량 변동률로 읽어서는 안 된다.

ㄹ. X: B는 판매 수입이 그대로이므로 수요량이 처음의 $\frac{1}{1.10} \approx 0.9091$배가 되어 약 9.09% 감소한다. C는 판매 수입이 6% 늘므로 수요량이 처음의 $\frac{1.06}{1.10} \approx 0.9636$배가 되어 약 3.64% 감소한다. 가격 상승률이 같은데 B의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므로, **B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C보다 크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억 달러)

	2015년	2016년
상품 수지	100	110
서비스 수지	200	210
(가)	10	−20
이전 소득 수지	−20	10

①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②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③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④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임금·이자·배당 등 생산 요소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록하는 **본원소득 수지**이다.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 자본을 이용한 대가이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액에서 상품 수입액을 뺀 값이다. 표에서 상품 수지 흑자가 2015년 100억 달러에서 2016년 110억 달러로 늘었지만, 이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가 커졌다는 뜻이다. 각 연도의 수출액과 수입액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금액의 증가율은 비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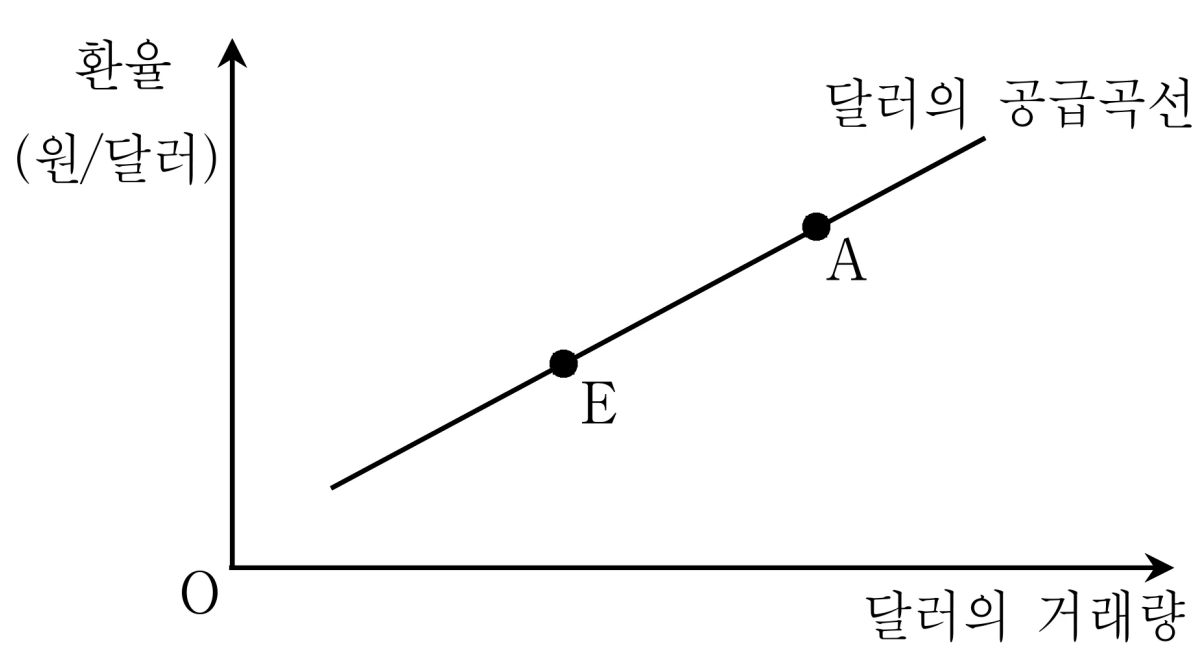
② X: 서비스 수지 흑자는 2015년 200억 달러, 2016년 210억 달러로 상품 수지 흑자보다 크다. 그러나 수지는 수입과 지급의 차액이며, 거래 규모는 거래한 금액 전체를 뜻한다. 따라서 **수지 흑자의 크기만으로 전체 거래 규모를 비교할 수 없다**. 표로 확인되는 것은 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상품 수지의 흑자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③ O: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가)는 본원소득 수지이다. 본원소득 수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외국과 주고받는 임금·이자·배당 등을 기록한다.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리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 자본을 이용한 대가**이므로 본원소득 수지의 지급 항목에 포함된다.

④ X: 이전소득 수지는 원조나 무상 송금처럼 대가 없이 외국과 주고받은 소득의 차액이다. 2015년 −20억 달러는 받은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많았음을, 2016년 10억 달러는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많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전소득 전체로는 **순지급에서 순수취로 바뀌었다**. 또한 이전소득에는 원조 외의 항목도 포함되므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②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③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④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국 상품의 수입이 늘면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 공급곡선이 그대로이면 환율이 오르고 달러 거래량이 늘어나므로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세로축은 환율(원/달러), 가로축은 달러 거래량이다. A는 E보다 오른쪽 위에 있으므로 환율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 상태이다. 같은 달러 공급곡선 위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려면 **달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공급 증가'가 아니라, 환율 상승에 따라 기존 공급곡선 위에서 '공급량 증가'가 일어난다. 각 요인의 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고 판단한다.

① X: 한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한국 금융 자산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난다. 유입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달러 수요가 일정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E → A의 이동과 다르다.

② O: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면 한국의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구입한다.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이 일정하면 환율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여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한다.

③ X: 미국의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도 줄어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 **달러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달러 수요가 일정하면 환율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거래량도 증가하는 E → A의 이동과 다르다.

④ X: 미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 대금으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달러 수요가 일정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므로 E → A의 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평소 한식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학원에 ㉡수강료 1백만 원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갑은 회사를 사직하고 한식 전문 요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갑이 알아본 결과 1년 간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매출 1억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재료비 7천만 원이 발생한다.

① ㉠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②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③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④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요리점 운영으로 매출에서 인건비·시설 보수비·재료비를 빼고 남는 돈은 연 4천만 원으로, 회사에 계속 다닐 때 받는 **연봉 6천만 원보다 적다**. 따라서 제시된 금전적 조건에서는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연봉 6천만 원은 요리점을 운영하려고 회사를 그만두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이므로 **암묵적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은 요리점 운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시설 보수비·재료비이며, 연간 합계는 3천만 원 + 1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1천만 원이다.

② X: ㉡의 수강료 1백만 원은 이미 지출하였고 현재의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다. 요리점을 운영하든 운영하지 않든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합리적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③ X: 요리점 운영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실제 운영비 1억 1천만 원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포기하는 연봉 6천만 원을 더하므로, 연간 기회비용은 1억 7천만 원이다. 1억 1천만 원은 명시적 비용만 계산한 금액이다.

④ O: 요리점 운영의 경제적 이윤은 매출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다. 연간 매출 1억 5천만 원에서 기회비용 1억 7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다. 이는 운영비를 내고 남는 4천만 원이 회사에 계속 다닐 때의 연봉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시된 금전적 조건에서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갑국의 실업률은 매우 양호하지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갑국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다.

① 취업자 수
② 실업자 수
③ 경제활동인구
④ 비경제활동인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므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그런데 취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늘어난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는 뜻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나머지인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고용률은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취업률은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① 취업자 수: 증가한다. 고용률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므로 고용률 상승은 분자인 취업자 수의 증가를 뜻한다.

② 실업자 수: 증가한다. 실업자 수가 그대로이거나 줄었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날 때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취업률이 하락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가와 취업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실업자 수도 증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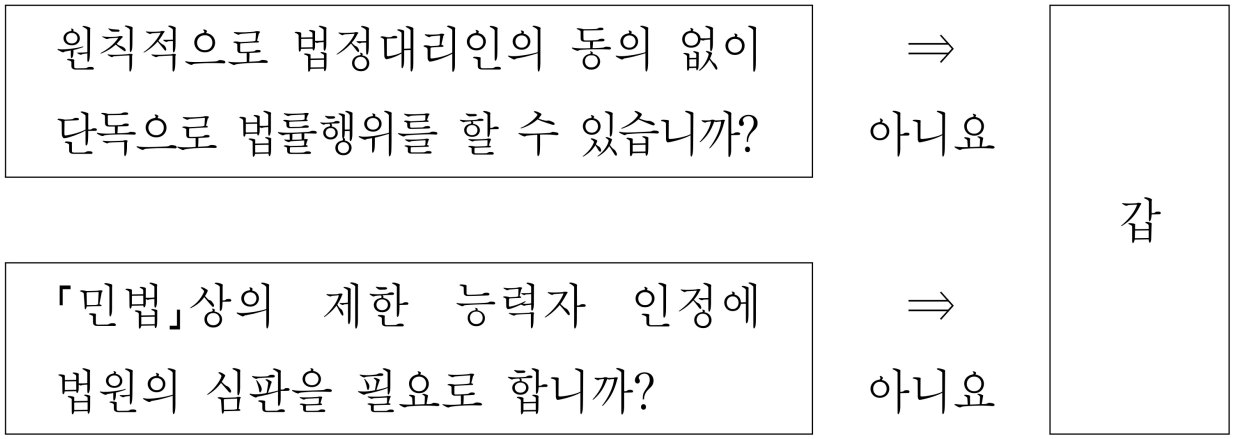
③ 경제활동인구: 증가한다. 취업률의 분자인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도 그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 수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④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한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으므로, 그 나머지인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따라서 네 인구 지표 중 감소한 것은 ④의 비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민법」 상의 제한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될 수 있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상대방은 이를 확정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갑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가 되는 데 법원의 심판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이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개시를 위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① X: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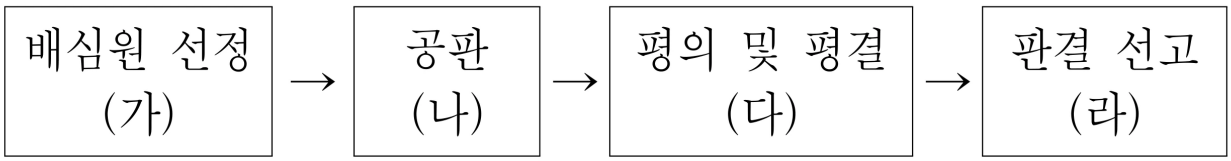
② X: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X: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모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를 '의무만 면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상대방은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추인 후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확답 촉구권은 거래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인정된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② (가)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③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대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일반 국민인 배심원을 선정하고, 공판 후 배심원이 평의와 평결을 거친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이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판결은 법원이 선고한다.

①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희망하더라도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실시하지 않으므로, 희망 의사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같은 법 제16조는 배심원의 기본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지만, **연령과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격사유나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 따른 제척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8조에 따라 법관·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X: (나)의 공판은 단독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한다. 합의부는 여러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이다. 배심원이 참여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주체가 단독판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④ X: (다)에서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라)의 판결 선고에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이 반드시 평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면제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 A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 판정이 ㉢ 재심에서 내려졌다.
이 판정은 ㉣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①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③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④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의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담당하고, 그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의 판정에 불복하여 진행된 ㉢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다.

② O: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도 포함된다. 제시문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재심에서 인정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것이다.

③ O: 재심판정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초심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A회사의 노동조합**이다.

④ X: ㉡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해당한다. A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여기서 다투는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A, B, C가 있다. 우선, 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B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B가 조각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서 C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하고, C가 조각되지 않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②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④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강요된 행위는 **책임(C)**이 조각되지만, 정당방위는 **위법성(B)**이 조각된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배제되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A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요건에 들어맞는다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위법성, C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다는 책임이다. 지문은 **구성 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순서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각'은 해당 요건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② O: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통상 법질서가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그 추정이 깨져 위법성이 부정된다.

③ O: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체포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B)이 조각된다. 영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다. 이 경우 적법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책임(C)이 조각**된다. 반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므로 **위법성(B)이 조각**된다. 따라서 '모두 C가 조각된다'는 표현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부분을 'B가 조각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기>
ㄱ.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의 보장
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ㄷ. 대의제의 채택
ㄹ. 최저임금제의 실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헌법 제1조는 국가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나타낸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헌법 제1조의 민주 공화국 및 국민 주권 선언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표현하며, 그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ㄱ. O: 선거권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 권력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공무 담임권은 공직을 맡아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두 권리를 보장하면 국민이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ㄴ. O: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ㄷ. O: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모든 국가 사안을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ㄹ. X: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나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 주권 원리보다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국민 주권의 실현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